

# 남북 경협 전망과 민간 기업의 역할

조용준 / Y&J컨설팅 대표

## 김일성 사후 북한과 남북 관계의 정치적 고려

**이** 명을 원하는 한 북한 대외 문제 전문가는 언젠가 필자에게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개방 모델을 채택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남한이라는 존재의 위협이다”는 지적을 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은 과거 북한의 반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반미나 반일 구호가 남한에 대한 경계심으로 전이됐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남북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경색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정권이 김일성 사망 전 수년 전부터 생존 활로로 추진한 자본주의 국제분업체제에 대한 편입이라는 ‘대세’를 앞에 두고, 내부 단속을 위해 체제에 대한 안전 담보를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조속히 받아내야겠다는 욕구가 절실해졌고, 이를 위해 기존의 정전체제를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싶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

는 이유는 자본주의국제분업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강대국의 안전 보장,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정통성 경쟁을 벌이는 남한의 주도권 배제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제한된 경제 개방·개혁 모색과 체제 안전 담보를 위한 각종 ‘위협’ 행동들이 동시에 혼재하는 것은 보수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북한내 개방파와 보수파의 대립이라는 틀보다는, 북한체제 생존 전략을 위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틀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 경수로 건설, 자유무역지대 설정 등으로 제한적이거나 택했던 개방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안전 담보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지배층의 불안감은 증폭될 것이고 이러한 불안감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과 직결될 것이다.

제네바합의와 경수로협정 체결로 북미 蜜月 구도가 한국에서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국가로 묶여 교역이 제한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중동 수출 의혹과 화학 무기 보유 의혹 등도 미국 당국에 의해 계속 제기되고

현재 북한 지배층 내부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의 保革 대립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같은 保革 대립은 과거의 이념 대립보다는 개방과 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전 담보 사이의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노선 대립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본다.

있으며, 미국의 對북한 라디오 방송인 '라이오 프리 아시아(RFA)' 방송이 최근 개시된 것,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도 북미 관계 정상화 지연과 함께 북한 지배층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정부의 對북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붕괴 위기에 대비 유엔군 투입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각종 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혀 영향력을 강화, 정권의 親美化를 유도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상호 반목이 예상된다.

현재 북한 지배층 내부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의 保革 대립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같은 保革 대립은 과거의 이념 대립보다는 개방과 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전 담보 사이의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노선 대립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본다.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정책 우선 순위를 둘러싼 노선 갈등 양상과 관련, "김정일의 공식 권력 승계를 앞두고, 숨지기 직전 시

기인 노년기 김일성의 유훈 교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놓고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세력들이 '김

일성'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빌려 이의 아전인수식 혜택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에 유리하게 정책 기초를 설정하기 위해 대립할 수 있다는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

북한체제의 개방을 앞둔 정책 기초 상의 미묘한 갈등은 자유무역지대 관할권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립과 국토 개발을 위한 주요 국가 예산의 배당에 대한 지역정부간 신경전에서 표출될 수 있다.

군 현대화·군 중립 개혁 작업 對'현 체제 고수'라는 군부내 노선 대립도 앞으로 예상되는데, 최광 인민무력부장 사망 이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민무력부장직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관측이 일부 북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를 추가 세수 수익의 대상으로 고려할 재무 당국과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를 기대하는 중앙은행간에 세금 징수율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며, 철도 당국과 해운 당국이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내 사회간접자본 개발 방향의 우선 순위와 제한된 예산 배당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도 당국과 해운 당국은 제한된 국가 예산 배당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 개발을 위한 외화 유치에 상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대를 無비자 지역으로 설정한 대외 경제 관료들과 안전 관계 관료들간의 외국인 통행에 대한 통제권 다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 현재 북한체제 어려움의 본질은 최근 가시화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보다는 사회주의국가분업체제의 붕괴와 중화학 공업 편중 정책의 파탄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본주의국제분업체제 편입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 단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 사후 3년 현 경제 위기시의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의 상징적 징표로 지역주의의 증대, 사회적 이동의 증가, 각 부처간의 지나친 경쟁과 협력체제 붕괴 등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지역주의의 증대는 지역간의 경제적 편차와 지역이기주의의 증대를 의미한다. 북한 초기 공업화의 선도 지역이면서 현재는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는 함경도 지역을 중·횡단하며 느낀 것은 자동차로 30분~1시간

거시적으로 현재 북한체제 어려움의 본질은 최근 가시화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보다는 사회주의국가분업체제의 붕괴와 중화학 공업 편중 정책의 파탄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본주의국제분업체제 편입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 단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거리인 인근 마을간의 경제적 격차가 눈에 띄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남양이나 온성, 새별 등지의 작황이나 주민 형편은 은덕(舊아오지)이나 북한·러시아 국경지대인 응상 등과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또한 종적으로 비교해서 청진과 화성 등간의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정부의 수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확한 파악과 지방정부의 성실한 보고,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민들간의 인기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이밖에도 국경지대에서 시작돼 점차 내륙지대로 확산되고 있는 장마당도 지역 격차와 빈부 격차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있다.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구호가 농촌 곳곳에 게시된 것도 북한 주민들의 이기심이 국가 소유 논밭보다는 개인 텃밭에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해주고 있다.

둘째, 사회적 이동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가중되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북한의 각

김일성 사후 3년, 현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의 상징적 징표로서

- ① 지역간의 경제적 편차와 지역이기주의의 증대를 의미하는 지역주의의 증대, ② 사회적 이동의 증가, ③ 각 부처간의 지나친 경쟁과 상호협력체제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세 가지 위기의 징후들은 북한의 중앙 당국이 대외 관계 개선과 체제 안전 담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 정부의 통제력을 극대화시켜나가기에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대 당국은 주민들이 형편이 비교적 나은 농어촌 지역이나 국경지대로 식량을 구하러 나서는 일을 무조건 막을 명분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점차 허용해나갈 수밖에 없어졌고, 이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은 지역간의 형편을 서로 비교해보고 나라가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정보나마 상호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같은 기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 빈곤감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방문중 목격되는 낡은 열차 지붕 위에 올라타 있는 수십 명의 군인들은 사회적 이동의 극명한 예이다.

셋째, 각 부처간의 지나친 경쟁과 상호협력체제 파괴는 체제의 조화(harmony)를 깨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군부와 각 지방정부, 정무원, 반독립 무역 기관간의 지나친 실적 경쟁과 지도자에 대한 수직적인 충성 경쟁은 부처간의 수평적인 협력체제를 깨뜨려 상호 반목을 조장하고 중앙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과 운용을 방해할 소지가 높다. 또한 지도

자에 대한 충성의 잣대이자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외화 획득 실적을 놓고 벌이는 지나친 경쟁은 남북한 경제협력 면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한 등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놓고 벌이는 부처간의 경쟁을 경쟁 부처간의 수뢰 의혹, 국가 정보 유출 의혹 제기나 관계자 처벌 등으로 이어져 관계국간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북한 고위 관계자의 망명 사태 원인을 정치적 요인보다는 세번째 위기의 상징적 사태라고 해석하고 싶다.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 부처간의 경쟁은 남한 기업에게 이롭게 비쳐질지 모르나, 제한된 대외 경제 관료의 부침 현상과 잦은 내부 이동은 안정적인 남북 경제 교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위기의 징후들은 북한의 중앙 당국이 대외 관계 개선과 체제 안전 담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 정부의 통제력을 극대화시켜나가기에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얼마전 한국의 한 유수 월간지에 게재된 북한 관련 좌담회의 제목인 '붕괴하는 북한, 쇠퇴하는 한국'이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붕괴'와 '쇠퇴'를 상호 피하고 경제 개방·개

혁과 세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윈-윈' (Win 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향은 북한 지배층이 체제 유지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게 해 개방과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국제분업체제를 가속화하도록 유도하는 한국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김정일시대 북한과 남북 관계의 경제적 고려

북한에서 1987~89년 2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러시아 출신 북한 문제 전문가 알렉산드르 만수로브 박사(Alexandre Mansourov, 콜럼비아대 국제정치학)는 지난 8월 18일자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의 10월 권력 승계를 예상했다.

만수로브 박사는 김정일 10월 권력승계설의 근거로, 10여 명의 러시아 유력 인사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10월에 북한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을 비워놓으라는 요청을 담은 사실 상의 초청장을 받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 지연 이유를 한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 “김일성 사후 3년이 지났지만 김정일이 자신의 존재를 인민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필요한 새 선물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권력 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김정일은 일단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보다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안과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일승계설과 관련, 김정일이 지미 카터 전 美 대통령에게 최근 방북 초청을 한 것과 미국 정부가 식량난 실태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최초로 파견하기로 밝힌 것이 주목된다.

김정일 주석 승계와 함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 平和案과 획기적인 시장 경제 지향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 하원대표단의 평양 방문시 북한 당국이 가동이 중단된 산업 시설에 러시아 방식을 접목해 경영진과 노동진에게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기관 투자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시장 경제 지향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

권력 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김정일은 일단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보다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안과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일승계설과 관련, 김정일이 지미 카터 전 美 대통령에게 최근 방북 초청을 한 것과 미국 정부가 식량난 실태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최초로 파견하기로 밝힌 것이 주목된다.

김정일의 승계 후에는 체제 안전 담보와

김정일 승계 전망과 관련, 한국의 새 정부는 남북 경제 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기본 자세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새 정부의 대북한 자세 정립과 함께 경제 개방·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체제와 비교되는 북한 경제 구조의 특수성이 남북 경협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 개방·개혁 우선을 둘러싼 노선 대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북한내 지배층의 분위기가 다소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두 노선 상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며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김정일의 리더십도 통치력의 시험이라는 '위험 부담'과 새로운 내외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일의 승계가 만약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험 부담에 대한 고려때문일 것이고 그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김정일 승계 전망과 관련, 한국의 새 정부는 남북 경제 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기본 자세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정식 교수(美 펜실베니아대)는 한국의 대북한 자세 정립 필요성과 관련, 최근 발표한 '남북 대결과 평화 통일'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고 있기도 한 반면에, 북한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붕괴를 원한다는 전제에서 택하는 전략과 공존 공영을 목표로 삼은 정책

간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한국 새 정부의 대북한 자세 정립과 함께 경제 개방·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체제와 비교되는 북한 경제 구조의 특수성이 남북 경협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커스 놀란(Marcus Noland) 미국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계량 분석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력 분포는 동구권 어느 나라보다도 중공업화의 비중(57%)이 높고 농업 분야(25%)나 서비스 산업(18%)의 비중이 빈약하기 때문에, 개방이 되면 50% 가량 떨어질 군수 및 중화학 공업의 진부화된 자본 스톡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Marcus Noland(1997): G. Sinn & H. Sinn(1992)). 국유 중공업에 취업한 노동력의 비율이 15%인 중국과 비교해 북한은 그 4 배의 후유증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이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71%의 노동력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물꼬가 터진 후 농촌 잉여 인력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이다.

마커스 놀란 연구원은 이 같은 계량 분석에 입각해 북한이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운용 방향으로 후유증을 클 '개혁·개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증시킬 '현상 유지'라는 양극단 사이의 '임기 응변식 대처'(Muddling through)라는 절충 방식을 예상하면서, 과도기 루마니아의 경험을 그 전형으로 지적했다. 인구 1인당 소득, 노동 분포, 중앙 계획화 시책, 개인 송배 등이 북한과 유사한 루마니아가 80년대초 대외 부채 상황을 위해 소비 억제 정책을 택해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악화된 데 이어, 1985년부터 유류 파동 중에 흑한을 맞았으나 1989년이 되어서야 차우체스쿠 정권이 민중 봉기가 아닌 정권 내부의 쿠데타에 의해 붕괴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북한이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경제 운용 정책을 당분간 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역지사지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 바탕 하에서 남북 경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제분업체제 붕괴로 주요 교역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현재 겪고 있다. 1994년 기준으로 북한의 對서방 무역액은 12억 8,000만 달러로 구사회주의권의 무역액 8억 3,000만 달러를 앞지르기 시작했

한국은 북한이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경제 운용 정책을 당분간 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역지사지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 바탕 하에서 남북 경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제분업체제 붕괴로 주요 교역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현재 겪고 있다.

다.

또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은 1994년 기준 전체 무역의 29.6%를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일본이 북한 수출의 38.5%인 3억 3,000만 달러를 점유하고 있다. 연 20억 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최대 무역 대상국 구소련은 현재 연 2억 달러 이하로 총교역 규모가 하락, 전체 교역의 6.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고, 러시아에 이어 독일이 북한 전체 교역의 5.5%, 이탈리아가 5.1%, 홍콩과 인도가 4.5%를 점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 규모는 1992년 1억 7,300만 달러, 1993년 1억 8,600만 달러, 1994년 1억 9,400만 달러로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에 공식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994년 기준 북한 전체 교역 순위에서 중국(29.6%), 일본(23.5%) 다음의 3위이고 전체 교역의 약 9.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록 남북 경협이 당분간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북한 경제 회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섬유 분야의 남북 임가공 교류가 매우 긴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섬유 기계, 가죽 가공 기계 수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도 임가공 사업은 정상 가동이 중단된 많은 산업 시설의 유휴 인력을 흡수, 북한 산업 인력 구조 변화와 진부화된 중공업 부분 해체와 전환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한 재미 교포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를 110억 달러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무역 규모에 대한 평가에서 남북간에 큰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1993년에 종료된 제3차 7개년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최대 수출 상품인 비금속 제품의 수출이 1994년 기준 전년에 비해 36% 줄어 1억 8,8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방직용 섬유 제품은 전년과 같이 2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 최대 수출 상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북한 경제 회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섬유 분야의 남북 임가공 교류가 매우 긴요함을 알 수 있다. 남북 임가공 교류의 증가는 남한 반입 위주(1995년 8월까지 남한의 반입은 통관액 기준 8억 1,800만 달러로 전체 교역 총액 9억 달러의 90% 차지)와 금속 제품 반입 집중(1992년부터 1995년 8월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전체 반입량 80%가 금과 및 아연과를 포함한 빌레트 등 1차원임)이라는 무역 패턴 개선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최근 섬유 기계, 가죽 가공 기계 수입

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도 임가공 사업은 정상 가동이 중단된 많은 산업 시설의 유휴 인력을 흡수, 북한 산업 인력 구조 변화와 진부화된 중공업 부분 해체와 전환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한 데 이어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환관리법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왔으나, 1984년 9월 이후 1993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는 140여 건, 1억 5,0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저조했다.

이에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평방킬로미터(이후 746평방킬로미터로 확대)의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발표했다.

1996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동으로 개최된 나진·선봉국제투자토론회에서는 비록 한국 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서도, 6개 프로젝트에 2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약과 10 개 프로젝트에 5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양해 각서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1991년 12월 자유무역지대 선포 후 투자토론회 전까지 유치한

49 개 프로젝트 3억 5,000만 달러의 2 배에 맞먹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중화학 공업, 전용 공단 조성, 대규모 하부 구조 건설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홍콩 자본의 호텔 분야가 투자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북한은 국제투자토론회 개최 전 1 년 동안 도로, 호텔 등 하부 구조 마련에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위원장은 밝혔으나, 투자토론회 전 지난 4 년 동안 실질적으로 同지대에 투자된 해외 자본은 약 3,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여부가 북한 당국의 개방 의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면, 그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조일 것이 분명하다.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 개발 전망이 다소 비관적이나,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제한적이나마 투자 이행 속도가 빨라지고,

김정일시대 북한과의 남북 경협 방안과 민간 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전면적인 개방이나 본격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남북 경협 확대 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제한적인 지역이나마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남포공단 등을 적극 활용해 북한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초의 서방 은행인 페레그린은행 지점이 1996년 지대내 사무소를 개설했고 하부 구조와 통신 시설(태국 록솔리그룹)이 보강되고 있다는 점이다.

### 김정일시대 북한과 남북 경협 대안 모색

상기의 논의에 기초해 김정일시대 북한과의 남북 경협 방안과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기업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전면적인 개방이나 본격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남북 경협 확대 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제한적인 지역이나마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남포공단 등을 적극 활용해 북한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위원장 김정우)가 제작한 '황금의 삼각주 범규집(2)'인 「자유무역지대 외국 기업 상주 대표 사무소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임가공 전용 공단과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는 물류·수송 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에 상주 연락사무소로 사용될 현대식 오피스텔 공간과 회의실을 겸한 전시 공간 등을 조성해 남북한 경제인들이 정기적으로 투자와 교역상담회를 갖고, 상품과 교역 엑스포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인들이 네트워크되는 정보교류센터와 테크노 파크,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는 것이 시급하다.

에 대한 규정」(1994년 2월 21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에 따르면, “공화국(북한)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도 5 명에 한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9월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 참가중 만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필자에게 “내일이라도 5 명에 한해서는 자유무역지대 내에 남조선(한국) 기업대표부가 설치될 수 있다”며 “남조선 기업과 연계된 재외 교포 일부가 장기 체류권을 받고 지대 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대내 투자를 한 일부 해외 교포는 30년 장기체류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대에는 일부 한국 기업이 홍콩 법인을 통해 우회 투자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D그룹의 홍콩 법인 泰勝貿易有限公司를 통해 투자·설립한 나진호텔과 도로 사업 등이 있다.

북한의 대외 경제 관료들은 필자에게 “북한이 신의주나 남포·원산 지역을 추가 개방한다는 남한 언론의 발표는 나진·선봉자유무

역지대를 훼손하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 관료들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이 있어야만 추가 지대 개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에 관한 일본 ‘도요엔지니어링’社의 청사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도요엔지니어링社의 자유무역지대 개발 권고안에서 한국이 유의해야 할 점은 일본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 북한 동해안이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단기적 우려라기 보다는, 북한의 동해안 벨트가 일본의 이익을 반영한 개발 전략인 중화학 공업 단일 모델로 개발될 가능성이다. 회개발 청사진은 북한 당국이 제한된 개발 자원을 석유화학공단 조성과 임가공·경공업 지대 조성, 관광지 개발이라는 복합적 모델로 분산시켜서는 지대 개발이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북한과 일본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1970년 하반기에 동해안의 원산시와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가장 많이 받은 것도 유의할 만한 대목이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임가공 전용 공단과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는 물류·수송 기지로 개

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에 상주 연락사무소로 사용될 현대식 오피스텔 공간과 회의실을 겸한 전시 공간 등을 조성해 남북한 경제인들이 정기적으로

투자과 교역상담회를 갖고, 상품과 교역 엑스포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인들이 네트워킹되는 정보교류센터와 테크노파크,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는 것이 시급하다.

1996년 9월 나진국제투자토론회에 한국측 참가가 무산된 것과 관련, 남북한 경제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남북투자상담회가 한국의 신정부 출범 후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에 본격적인 남북 경제 교류시를 대비한 무역 실무 지식과 외국어 교육, 반숙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이 설립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 기관은 북한인 기술 인력 양성과 함께 한국 파견 요원의 현지화 연수장과 북한 개방 1세대와의 네트워킹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보다 한 발 먼저 한국의 산학협동경제연구센터나 무역인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등이 대북한 투자와 교류를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업무 수요에 대비하는 자세도 요망된다. 이밖에도 나

둘째, 한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남북 임가공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북한의 동북 지역·서해안 지역·남서 지역을 권역별로 개별 기업의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하는 개발 모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선봉지대 관계자들은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변경 무역 활성화를 위한 수송 수단의 지원을 한국 기업측에 절실하게 촉구하고 있다.

둘째, 한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남북 임가공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산업과 완구 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섬유·완구 분야에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전체 남북 교역액의 약 70% 이상이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1994년 기준 남북한 교역에 참가한 업체는 총 160 개 업체로서 1993년에 비해 28 개 업체가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교역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금까지 대북한 교역에 경험이 있는 240여 개 기업체 가운데 170 개 이상이 단 1 회로 거래가 끝났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용 공단 조성은 전체 남북한 교역에서 1992년 0.45%에서 1994년 12.5%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남북 임가공 교역 규모를 크게 늘려 남북 직교역으로 가는 과도기로서의 남북 임가공 교역의 비중을 높게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북한의 동북

넷째, 남북한 경제 교류 면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상호 역할 설정이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국제 조류에 맞게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기업, 비정부 기구(NGO), 지방정부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대 지역, 단체 대 단체 차원의 남북 경제·학술 교류를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서해안 지역·남서 지역을 권역별로 개별 기업의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하는 개발 모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진 소재 김책제철소와 함흥 소재 화학 공업, 경수호가 들어설 신포 지역, 승리화학공장과 나진, 선봉, 청진, 원산항이 위치한 동해안 벨트는 중화학·제철 중점 지역과 전력 개발 사업, 인접한 對러시아 진출 전략 기지로, 봉화화학공장, 황해제철연합기업소(송림)가 있는 서쪽과 서북쪽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는 인접한 중국과의 수송 물류 전략 지역으로, 평양·남포·개성을 포괄하는 남서부 경제 지역은 기계 제작 공업과 경공업·임가공지대로 중점 개발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를 피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주요한 투자배분지대와 노동력집중지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통일 문제를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실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걸프전에서 보여진 미국 신병기의 위력에 대한 공포가 '무력 통일' 포기의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북한의 남서부지역지대 공동 개발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넷째, 남북한 경제 교류 면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상호 역할 설정이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국제 조류에 맞게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경험 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국가 차원의 투자 안전 보장책이나 대금 결제 방식 마련, 개별 기업 차원의 투자를 특화 분야별로 조정하는 역할 등 전체적으로 남북 경험의 방향을 선도하는 '파일럿'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기업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가며 남북 경험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는 각종 발전소나 통신,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중공업 투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대신, 임가공 분야나 농업 분야 공동 연구, 농수산물 가공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규제를 철폐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기업, 비정부 기구(NGO), 지방정부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대 지역, 단체 대 단체 차원의 남북 경제·학술 교류를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광업협회 등이 협회 차원에서 북한의 광물을 공동 조사·채굴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것이며, 한국의 속초

시가 북한의 원산시와 도시 자매 결연을 맺고 금강산관광지대 공동 개발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속초-원산간 페리호 운항(1996년 9월 나진국제토론회 기간중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관계자가 필자와의 대화중 밝혔음)과 출입국 절차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지대 개발 사업은 남북 관계에 따라 남북 경협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모 기업의 투자 준비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인근 명천 칠보산도 주을온천과 함께 관광지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나진-칠보산간 페리호 운항과 숙박 시설 건립이 북한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비정부 민간경제연구센터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 경협의 수요와 공급자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간 농축산업 관련 단체나 기업이 북한과 인접한 중국 연변 지역이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농축산물 재배와 사육 연구소를 설립, 종자 개량이나 발전된 농

북한 지배층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 교류를 원만히 하기 위해 김정일시대에도 당분간 대남한 정책에서 민관 분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데, 이를 민과 관을 이간시키는 술책으로 비난만 하기 보다는 민간 기구를 통한 대북한 교류와 협력이라는 적극적인 계기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 재배와 사육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한측이 농기계, 비료 등을 제공하고 북한측이 농지와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생산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

정부 대 정부가 남북한의 안보와 정치적으로서만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 지역, 단체 대 단체 특히 비정부 기구가 남북한 경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 지배층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 교류를 원만히 하기 위해 김정일시대에도 당분간 대남한 정책에서 민관 분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데, 이를 민과 관을 이간시키는 술책으로 비난만 하기 보다는 민간 기구를 통한 대북한 교류와 협력이라는 적극적인 계기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자유무역지대가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감독권을 이양받아 독립채산제로 운용되고, 이 지역에서 '외화와 바꾼돈표'라는 중간 외환 교환 절차가 없어진 것을 주목할 만하다.

북한 지도부의 지역별 투자 정책은 이제

북한 지도부의 지역별 투자 정책은 이제까지 중앙과 지방, 각도간의 영향력 재분배에 따라 변해왔는데, 김일성시대와 비교해 중앙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김정일시대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개발과 투자 유치 자율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까지 중앙과 지방, 각도간의 영향력 재분배에 따라 변해왔는데, 김일성시대와 비교해 중앙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김정일시대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개발과 투자 유치 자율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도 산하의 무역 기관이나 대외 경제 기관의 보다 활발한 외화 유치 활동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참고로 북한의 시기별·지역별 투자 정책의 변모는 다음과 같다.

- 1945~49년: 일제 식민 통치 유산인 함흥과 청진의 제철 공업과 화학 공업 기지를 복구했다. 구소련군의 후방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받았던 평안남도의 조만식, 함경북도의 오옥섭 및 강계 지방 출신 인사들은 경제적으로 각 도의 입장을 강화시켰으며 민중들의 신망을 바탕으로 중앙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구소련 군정청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앙정부가 성립되면서

지방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 50년대 중반~60년대 중반: 각 도의 자립과 자주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 김일성이 평양과 중앙 경제 지

역에 대한 기본 투자를 집중시키는 동시에, 소련과와 연안파에 속했던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지도자들을 숙청함으로써 중앙 권력을 강화해갔다.

- 60년대 후반~70년대말: 1966~69년에 걸친 조선노동당내 파벌 투쟁에서 영향력이 증대된 중앙 관료 기구가 주도하여 투자 기본 방향이 중심지에서 지방으로 변해갔다.

- 80년대초~현재: 다시 투자의 흐름이 평양을 포함한 중앙 경제 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는 70년대 말부터 농촌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 외에도 김일성 중심의 중앙관료체제가 지위가 향상된 지방 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경제적으로 중앙의 강화는 1986년부터 시작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이로 인한 자금 고갈을 유발시켰으나, 20억 달러가 소요된 평양축전은 김일성 부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구 소련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는 동북쪽 함경남북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때는 서쪽과 서북쪽의 평안남

북도, 자강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구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차관과 경제 지원을 할 때 자국과 국경을 같이하는 지역들의 발전을 추구했고, 북한도 이에 대응해 경제 협력을 원할 때는 지원국의 이해에 맞게 투자를 할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동북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서부 지역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북한의 대일 관계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에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는 군수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과 이 지역을 잠재력있는 경제 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교차하고 있다.

여섯째, 남북한 경험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를 ‘동북아’라는 지역적 틀 속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자세를 기업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위원장은 1992년 가진 한 재미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태국,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개척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지역 블록화로 가는 것은 세계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에 대처한 지역 경제화 문제에 대한 연구 토론이 있어야겠다는 개인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1994년 기준으로 한국의 동북아 권역내 교역 비중(對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교역 총계)은 전체 교역에서 수출 21.57%, 수입 31.52%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동북한 권역내 교역 비중은 전체 교역에서 수출 81.88%, 수입 61.78%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베리아와 몽고의 삼림과 천연가스 개발에 남북한이 자본과 장비·인력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과 유라시아 횡단 철도 사업 공동 참여는 동북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역내 무역 증가와 관련해 국가간의 기술 격차에 따른 종속 관계 심화와 일본 주도의 수직적 국제 분업을 의미하는 雁行型 모델(flying geese model)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역내 무역 증가와 관련해 국가간의 기술 격차에 따른 종속 관계 심화와 일본 주도의 수직적 국제 분업을 의미하는 雁行型 모델(flying geese model)

일곱째, 한국 기업은 북한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해외 동포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의 대북한 노하우를 한국 기업의 자본과 연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이 최근 개최된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4만여 개에 달하는 핵심 국유 기업의 개혁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에 있을 북한 국유 기업 개혁 작업과 이에 대한 참여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은 피해야 한다. 동북아 역내 교역과 남북 경험에서 특구와 특구, 지방과 지방, 단체와 단체간 교류의 역할이 주요한 것도 이같은 방법이 안정형 모델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방과 지방 차원의 민간 기술 이전이 국가간 기술 이전보다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일곱째, 한국 기업은 북한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해외 동포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의 대북한 노하우를 한국 기업의 자본과 연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북한 부서에 젊은 해외 국적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남북 경험을 현지에서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여덟째,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이 최근 개최된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全大)를 계기로 4만여 개에 달하는 핵심 국유 기업의 개혁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에 있을 북한 국유 기업 개혁 작업과 이에 대한 참여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5全大에서 국유 기업의 개혁 수단으로서의 주식제에 대해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기업과 자본의 운용 효율에 유리하며 자본주

의·사회주의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천명하여, 국가 기업 개혁과 관련 “국영 기업 개혁과 경제 구조 재조정을 심화함에 따라 실업과 인력 이동은 불가피하며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과거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江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 사상을 새로운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개혁에 鄧사상의 권위를 원용하는 방식은 김정일의 유혼 통치 방식과 개혁 논리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앞으로의 남북 경험 진전을 위한 단상

한국도 이제는 ‘분단’ 이냐 (흡수) ‘통일’ 이냐라는 과거의 시각보다는 ‘긴장’ 이냐 ‘평화 공존’ 이냐라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 바탕에서 자유무역지대와 시장 중심으로, 남북한 시장 접합(articulation)의 정도를 넓혀나가 남북한 평화 공존이 영구 분단이 아닌 통일로 가는 길목이 되도록 하



는 장기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나 정부 주도보다는 경제 논리를 바

탕으로 한 지역 대 지역, 단체 대 단체간 남북 경협이 적극적으로 진작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 통합 과정을 峰郡의 合峰 과정에 비유하면, 자유무역지대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교류가 시장의 접합을 거쳐 경제 단위와 체제의 상호 접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고전 大學에 '修身 濟家 治國 平天下' 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화시대에는 민족 국가 단위의 '治國' 후 '平天下' 라는 논리보다는 '治國' 과 '平天下' 를 병행하거나 때로는 '平天下' 후 '治國' 하는 논리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사이에 있고,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초강대국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 양상은 한반도 문제를 '동남아' 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 볼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 문제도 '동북아 지역 안정' 과 '동북아 지역 경제권과 공동안보', '미국과 중국 세력의 완충' 이라는 '平

한반도가 동북아지대 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완충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남북한이 선도하는 한반도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경협의 성과는 이런 면에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민간 기업도 각자 가져야 할 것이다.

天下' 틀 속에서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경협을 단기적으로 저렴한 북한 노동력에 대한 관심과 민족 내부 거래라는 남북한 '治國' 차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의 만주·몽고 지역을 포괄하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공동 개발 참여라는 큰 틀 속에서 철저히 상호 이익의 원칙을 견지하며 추진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한반도가 동북아지대 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완충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남북한이 선도하는 한반도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경협의 성과는 이런 면에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민간 기업도 각자 가져야 할 것이다.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전후해 지어진 평양의 많은 현대식 조형물을 보면서 북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웅장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 디자인의 영성함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남북 경협의 방향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부족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9